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26.7.1.)
- ②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 ('26.7.3.)
- ③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26.7.13.)
- ④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26.7.14.)
- ⑤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26.7.2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공동주관,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 개최…10여 년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 집대성
-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따른 차세대 반부패 전략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집대성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개국*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대표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전파해왔다.

*14개국: (아프리카) 알제리, 잠비아, (아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유럽) 코소보,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통가, 바누아투, (중남미) 콜롬비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

도화,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번	국가	사업 성과
1	베트남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반부패 평가지수(PACA)를 개발하여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여 전국 시행
2	우즈베키스탄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부패 신고 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타지키스탄 등 주변 협력국에 공유
3	말레이시아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개발 중인 말레이시아의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MGI)의 토대로 활용
4	알제리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렴성과지수(NAZAHA)를 개발 및 시행하고,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평가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중
5	몬테네그로	청렴도 평가를 부문별 평가보고서(Integrity in Action)를 통해 개선권고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 법령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192개 당사국이 가입된 UN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
6	스리랑카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여, 청렴도 평가 전담 부서(IAU)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확대
7	미얀마	부패영향평가를 국가토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활용
8	코소보*	부패영향평가를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식별된 부패요인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재산·소득신고법을 개정 청렴포털을 도입하여 국가 부패신고의 92%를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
9	콜롬비아	부패영향평가를 지방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법령의 부패위험요인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멕시코 등 주변협력국에 공유
10	몽골	청렴포털을 모델로 부패·신고 접수 창구 단일화하고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응답시간을 23% 단축, 중복신고를 30% 감소시킴

* 코소보에 대한 모든 언급은 UN 안보리 결의 1244('99)에 근거함

※ 타지키스탄, 잠비아, 통가, 바누아투는 사업 추진 중('26~)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단순한 지식의 교류가 아닌 한 국가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CPI)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2016년) 52위(180개국) → (2025년) 31위(182개국)

□ 이번 포럼에는 총 17개국이 참여하며, 사업 대상 국가의 반부패 기관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7월 2일에 실시되는 개회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UNDP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 고위급 연사의 축사와,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다니엘 카우프만(Daniel Kaufmann)*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인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경제학자 겸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개회식에 이어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 방안,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

- 국민권익위,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성료…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대상 국가,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반부패 전문가 참석
-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노력 및 성과와 한국형 반부패 모델의 우수성을 조명하는 한편,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따른 차세대 반부패 전략 도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부터 오늘(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전문가와 반부패 실무자들이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권익위와 UNDP가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을 현지에 도입해 온 국가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따른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과 비전을 논의했다.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외교부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기를 지나 정착·고도화 단계로 도약, ▲상호 학습 및 남남·삼각협력*(SSTC)을 통한 성과 확산 가속화, ▲AI 및 디지털 혁신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포용적인 청렴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라는 다섯 가지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도출하고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활동에 있어 이정표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 남남·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개발도상국 간 협력에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등 제3자가 자금, 기술, 노하우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체계

이와 더불어, 참석 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와 UNDP의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투명성, 책무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촉매 역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확고한 법적 기반 구축과 디지털 혁신 수용부터 민간 부문의 윤리적 기업 관행 촉진에 이르기까지 범분야적 반부패 노력을 심도 있게 다루며, 남남협력과 교류의 장으로의 역할을 했다.

지난 2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식교류로 시작된 우리의 협력은 하나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라고 밝히며,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청렴은 선진국의 여유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점을 역설했다.

□ 이와 더불어, 포럼 참가국들은 한국형 반부패 모델과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몬테네그로는 변화의 핵심 주체로서 청렴 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스리랑카는 내부 감사 부서(Internal Affairs Units)의 제도화를 청렴도 평가 체계의 중심에 두었다. 청렴포털을 도입한 우즈베키스탄은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될 때

디지털 도구가 가장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 중인 타지키스탄은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기반으로 청렴포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포괄적인 한국형 반부패 모델을 동시에 적용하여 부패 방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 아울러, 각국 반부패 기관, 민간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촉진 필요성과 청렴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나아가 거버넌스 전문가인 다니엘 카우프만(Daniel Kaufmann*) 천연자원 거버넌스연구소(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공동 설립자 겸 명예회장은 ‘진화하는 반부패 및 제도 개혁 환경을 바탕으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 국가의 제도 수준을 정량화한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경제학자 겸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 UNDP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은 "각국의 우선순위와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지식 교류 및 실질적인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SDG 파트너십(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여러 논의와 전략을 바탕으로 파트너 국가의 실질적인 부패척결을 지원하고, 한국이 글로벌 반부패 선도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 개최(7.13.~7.31.)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16.9.28.) 1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31일까지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2bYEI>)을 통해 사연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사례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공모전 참가 QR코드

화시킨 이야기 등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을 진솔하게 담으면 된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로, ▲접대가 일상이었던 ‘라떼는 말이야~’ 상사의 이야기, ▲일상 대화 속에서 느낀 ‘저렇게까지 부정청탁을 했어?’의 순간들, ▲‘예의상’ 가져온 선물로 불편했던 상황을 청탁금지법 덕에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스스로를 변

-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사연 중 심사를 통해 3건을 선정하여 우수사례상으로 40만 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어를 증정하고, 그 밖에도 추첨을 통해 20건을 선정하여 편의점 상품권 등을 참가상으로 지급할 예

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부패방지국장은 “우리 생활 속에 청렴이 자리 잡을 때 반부패 정책이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이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함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의 금액별 구간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이로 인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의 산정 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유형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보상금의 산정 기준 (시행령 별표)

보상대상가액	산 정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행 보상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편한다. 기존의 수입회복액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수입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기준*은 유지한다.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한 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한다.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는 30억 원의 지급상한을 폐지하여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9일)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개통
 -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접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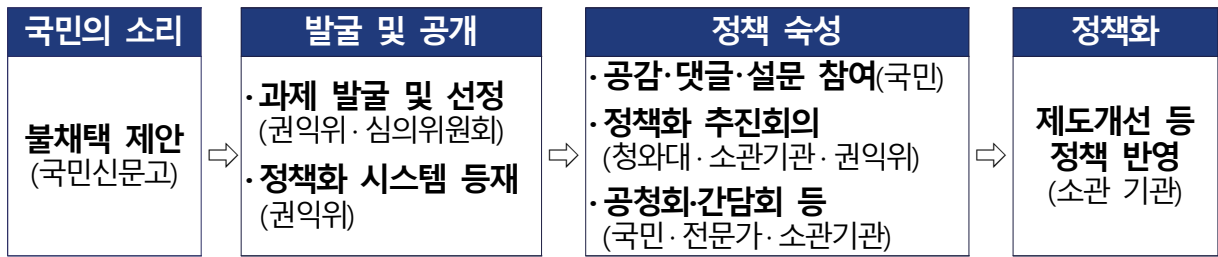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이음마당(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오늘(29일) 개통했다.

□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고, ▲85.2%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잠들뻔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민·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의 개통을 추진하게 되었다.

□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www.president.go.kr) [국민과 함께] 메뉴의 바로가기 그림 단추(아이콘)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 한편, 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확정된다.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 후 명칭 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 명칭 10개를 선정했으며,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본 시스템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받은 명칭을 시스템 이름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